

# 김정일 시대 북한 국내정치 변화(1997-2007): 지도이념, 권력승계, 당의 영도<sup>1)</sup>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 1. 문제의 제기

1994년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1995년부터 3년간 연속적으로 북한에 전례 없는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닥쳐 북한은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당시 기아로 사망한 북한 인구의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 수백만 명으로 추산된다.<sup>2)</sup> 그 같은 상황은 수많은 탈북자들을 발생시켰고, 외부의 다수 연구자들에게 북한체제의 붕괴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비쳤다.<sup>3)</sup>

이 같은 북한의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1997년에 한 연구자는 북한이 주체사상을 ‘붉은기철학’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였고,<sup>4)</sup> 다른 전문가는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뿌리로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주체사상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황장엽 비서의 망명은 김정일 정권을 그 근저에서부터 뒤흔드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sup>5)</sup> 또한 북한이 3년간 연이은 자연재해에서 벗어나 체제유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시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주체사상이 퇴조하고 있으며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다거나,<sup>6)</sup> 주체사상이 쇠퇴하여 ‘선군주의’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과연 이 같은 주장들처럼 김정일 시대에 주체사상이 ‘퇴조’ 또는 ‘쇠퇴’하였는가? 그래서 주체사상은 정말 붉은기철학이나 강성대국론 등과 같은 다른 사상으로 대체되었을까? 아니면 주체사상이 자신의 구성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정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여전히 통치이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본고의 2절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고 해답을 모색하려고 한다.

1) 본 논문은 공동연구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1997 vs. 2007』의 한 부분임.

2)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286-305쪽 참조.

3) 송영대 전 통일원 차관은 1997년 발표한 한 논문에서 “북한붕괴는 이제 시간과 방식의 문제일 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주변국과 우리의 대응에 따라 속도와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송영대, “북한의 내구력 - 정밀분석,” 『북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서울: 서울신문사, 1997), 140쪽.

4)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계간 사상』 (1997년 가을호), 138쪽.

5) 송영대, “북한의 내구력 - 정밀분석,” 130쪽.

6) 서재진,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북한체제의 현주소』 (서울: 통일연구원, 2002), 15~16쪽.

7) 신일철,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 쇠퇴』 (서울: 생각의나무, 2004), 13-14쪽.

북한 정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김정일이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 이후부터 1997년 10월 당 총비서직 취임 또는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직 재추대 시까지 군 최고사령관 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통치하였다고 설명한다.<sup>8)</sup> 이 같은 설명은 김정일이 1994년 7월부터 3년 3개월 동안 필요시 위의 두 직책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당 우위의 체제를 군부 우위의 체제로 바꾸지 않는 한, 군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직만을 가지고 당과 국가기구를 통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설명은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김정일이 당 총비서직에 취임하기 전까지 어떠한 직책과 지위를 가지고 통치했는지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 필자는 본고의 제3절에서 황장엽씨 등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 문헌들에 대한 실증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 김일성 사망 전 북한에서 어떻게 권력승계가 진행되었으며, 김정일이 어떻게 김일성 사후 3년 간 당 총비서직에 취임하지 않고도 북한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1997년 김정일의 당 총비서 취임과 1998년 국방위원장 재취임이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일성 사후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은 당 대회가 1980년의 제6차 대회 이후 열리지 않고 있으며, 6개월에 1회 이상 열려야 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1993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았고, 정치국 회의도 김정일 시대에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서 “당적 지도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거나 “노동당의 일당독재 현상은 상당부분 퇴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당의 상설조직체계의 기능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당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리고 정치국 회의 등 비상설 지도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 가지고 “당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당의 정치적 영도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적절한가? 필자는 본고의 제4절에서 김정일 시대 조선로동당이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과거 10년간 북한의 국내 정치 변동에 대한 분석은 향후 10년간의 북한 정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중장기적인 대북·통일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령의 후계자’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총비서직에 취임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의 국내 정치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결론 부분에서 짧게나마 한국의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8) 김창근은 김정일이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1997년 당 총비서직에 오르기까지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김근식은 김정일이 1998년까지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국가를 통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근, “북한 당·정·군 권위관계의 변화: 19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0), 173쪽;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정치 2』 (서울: 경인문화사, 2006), 272쪽 참조.

## II. 지도이념: 군사주의와 실용주의의 강화

1990년대 초에만 해도 조선로동당 지도부는 동구와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식(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특수성을 선전하는 것으로 동구 사회주의체제 붕괴와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 및 구소련 해체의 충격을 극복하려 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론은 탈냉전과 함께 북한의 대외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냉전시대에 형성되고 체계화된 기존의 주체사상만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주체사상의 보조담론, 통치담론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거의 50년간 북한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위대한 수령’이 사망하고,<sup>9)</sup> 경제난이 극도로 심화되는 등 대내적 상황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조선로동당 지도부는 ‘우리식 사회주의론’만으로는 당면하고 있던 위기를 돌파하는데 한계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인민대중에게 우월감이 아닌 ‘버팀과 인내의 집단적 의지’를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하게 된 것이다.<sup>10)</sup>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론과는 다른 새로운 주체사상의 하위 담론, 통치담론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붉은기’ 담론이 나오게 되었다. 북한이 ‘붉은기’의 상징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8월 28일자 『로동신문』에 “붉은기를 높이 들자”라는 제하의 정론을 실으면서부터였다. 이 정론에 따르면 김정일이 “우리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비겁한 자들은 혁명의 기발을 버리고 가지만 우리는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리라고 결심하였다”고 엄숙히 말했다고 한다.<sup>11)</sup> ‘붉은기’ 담론은 곧 ‘붉은기철학’과 ‘붉은기사상’에 대한 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북한이 1990년대 중반에 직면하였던 심각한 경제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12)</sup> 1997년 신년공동사설은 붉은기사상을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sup>13)</sup>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주체사상과 마찬가지로 ‘혁명적 수령관’이 붉은기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북한당국이 힘주어 강조하였던 김정일의 ‘붉은기사상’에 대한 언급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시점은 대략 1998년 4월경이다. 이 때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IMF의 관리체제하에 들어가고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함으로써 북한을 흡수 통일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서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과 함께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배제 및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 추진을 천명한 것도 북한에게 체제생존에 대한 안도감을 갖게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그전까지 가지고 있던 위기의식을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통치담론이었던 ‘붉은기사상’을 중도 폐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내외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이론이 처음으로 등

9) 김일성의 사망이 김정일에게 준 충격에 대해서는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 지음, 신현호 옮김, 『김정일의 요리사』 (서울: 월간조선사, 2003), 152-153쪽 참조.

10) 김근식, “북한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230쪽 참조.

11) 리종태·동태관, “붉은기를 높이 들자,” 『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 정론.

12) 식량난이 매우 심각했던 1996년 12월에 김정일은 군대에조차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에 “군량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 미제국주의자들이 당장 쳐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308-311쪽.

13) 『로동신문』, 1997년 1월 1일.

장한 것은 1998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서였다. 동 정론은 북한이 이미 ‘사상의 제일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가 좋은 사회주의제도와 전투력 있는 당, 충실하고 근면한 인민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경제문제를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구에 경제강국의 높이에 오르는 것은 확정적이다”라고 매우 희망적인, 그러나 대부분의 외부 연구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였다.<sup>14)</sup>

이 정론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8월 31일 북한은 ‘인공지구위성’(광명성1호)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따라서 8월 22일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구상 천명은 인공위성 발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인공지구위성’은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지만, 북한은 그 같은 사실을 은폐한 채 위성 발사로 “세계면전에서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여실히 과시했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바로 이 같은 ‘성과’를 가지고 북한은 1998년 9월 8일 김정일 당 총비서의 국방위원장 재취임을 축제 분위기에서 경축할 수 있었다.

북한은 1998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50주년을 기념하는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후 1999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의 기본 방향이 재확인되었고, 1999년 1월 1일 김정일 총비서가 당중앙위원회 고위간부들과 한 담화를 통해 강성대국 건설 방침을 직접 천명함으로써<sup>16)</sup> 강성대국론은 김일성 사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주체사상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보조적 담론, 건설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강성대국론의 등장과 함께 김정일의 경제 분야에 대한 현지도가 1998년부터 빈번해지기 시작하여 1999년도에는 보다 본격화되었다. 특히 1999년 말부터는 경제 사업에서의 ‘실리 보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sup>17)</sup>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북한의 구상은 2000년에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과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사상』이라는 두 권의 책을 발간함으로써 체계화되었다.

사회주의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이론은 당과 국가 활동, 혁명과 건설의 원칙으로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강조하고 있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을 탈냉전시대의 변화된 상황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강성대국론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사상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을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강국 건설을 위해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구현할 것과 전체인민의 일심단결,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강국 건설을 위해 군사 중시와 국방공업 발전,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국의 요새화, 전민의 무장화 등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민족경제,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경제, 인민적인 경제 건설 등을 강조하였다.<sup>18)</sup> 이 같은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1985년에 발간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서 북한이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한 것이었다.<sup>19)</sup> 그런데

14) 최철남·동태관·전성호,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9년 8월 22일 정론 참조.

15)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54쪽.

16)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88(1999)년 1월 1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452-464쪽.

17) “김정일의 북한 ... 지금 변화 중 <2>,” 『중앙일보』, 2000년 4월 25일.

18) 철학연구소,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21-60쪽.

19) 김창원,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참조.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북한 경제도 파탄상태에 놓이게 되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이상이 더 이상 일반 인민들을 고무시키지 못하게 되자 대신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면서 인민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강성대국 건설이론은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서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새로운 형태로 강조하면서도, 경제보다 군사를 더 중시하고 과거에는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실리주의 원칙’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전례 없이 강조하는 등 기존의 논리에 부분적 수정을 가하고 있다.<sup>20)</sup> 2002년에 단행된 7.1경제관리개선 조치라는 중요한 경제개혁과 신의주, 개성, 금강산 특구 지정이 강성대국론에서 제시된 ‘실리주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성대국론의 실용주의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강성대국론 제시와 함께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의 지도이념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현상은 선군정치 이론의 대두이다. 북한은 1997년 12월 12일자 로동신문을 정론을 통해 처음으로 ‘선군정치’에 대해 언급한 이후,<sup>21)</sup> 『철학연구』 1999년 1호에 게재된 고상진의 논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을 통해 선군정치에 대한 최초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고상진은 동 논문에서 선군정치를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정치”라고 정의하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 있게 밀고나가는 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특유의 정치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선군정치가 군대를 강화하는 정치로서 군대가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운다”고 강조하였다.<sup>22)</sup>

김일성 사후의 북한에서 군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북한 사회에서 군대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격상되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북한에서 1985년에 출간된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는 “수령이 노동자, 농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혁명의 보조역량을 꾸림으로써 강력한 주체적 혁명역량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강화한다”고 적고 있다.<sup>23)</sup>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는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워짐으로써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 노동자와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던 선로후군(先勞後軍)의 관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강화에 대한 강조<sup>24)</sup>도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에 대한 강조로 바뀌어 군대가 인민보다 앞에 위치하는 지위의 격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sup>25)</sup>

선군정치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화 시도는 2000년에 발간된 김철우의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북·미 관계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북한은 『선군시대의 조국을 가다』(2002), 『선군시대위인의 정치와 노래』(200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2002),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2003), 『위대한 선군시대』(2004),

20)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참조.

21) 최용덕·김정웅, “우리는 백배로 강해졌다,” 『로동신문』, 1997년 12월 12일 정론.

22) 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9), 17-18쪽.

23) 박일범,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216쪽.

24) 김정일,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1월 1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57쪽.

25) 『조선중앙통신』, 1998년 9월 5일, 2007년 2월 15일;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278쪽.

『선군정치와 조국통일』(2004),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강국』(2005) 등 선군정치와 관련하여 수많은 책을 발간하여 대내단결을 모색하였다.<sup>26)</sup> 그 과정에서 온 사회의 ‘선군사상 일색화’<sup>27)</sup>와 ‘선군사상에 기초한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sup>28)</sup>이 강조되고, 많은 문헌들에서 주체사상보다 선군사상이 더 많이 언급되는 것과 같은 전례 없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들에 주목하여 국내의 일부 연구자들은 김정일 시대에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2000년 이후 북한에서 선군정치에 대한 많은 책이 발간되고 북한 문헌들에서 선군사상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군사상이 아직까지는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이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인간개조이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 영도체계, 영도예술 등으로 구성된 주체사상을 대체할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선군사상은 ‘혁명의 주력군’인 군대가 ‘혁명의 참모부’인 당과 ‘혁명의 최고영도자’인 수령의 영도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를 정당화하는 주체사관의 기존 논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북한은 현재 선군사상 교양을 강조하면서도 “주체사상에 기초한 선군사상”<sup>30)</sup> 또는 “주체의 선군사상”<sup>31)</sup>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선군사상이 결코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사상이 아니며,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주체사상과 어느 정도 구별되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사상임을 시사한다.<sup>32)</sup> 그러므로 북한은 많은 문헌들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교양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며,<sup>33)</sup> “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일색화”<sup>34)</sup>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선군정치 이론 또는 선군사상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1998년 이후 북한 문헌에서 강성대국론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할 때까지 안보 논리적 성격이 강한 선군정치를 주로 강조하다가 이후 북·미 직접 대화가 시작되고, 2007년에 북핵 관련 2.13 합의와 10.3합의 그리고 10.4남북정상선언이 채택되자 다시 강성대국론이라는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인 담론을 과거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다. 2007년 11월 30일 개최된 전국지식인대회에서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비서는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이 되는 해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sup>35)</sup>고 말했는데, 북한이 이처럼 강성대국에의 진입 시점을 제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처럼 북한은 주체사상과

26) 강성길, 『선군시대의 조국을 가다』 (평양: 평양출판사, 2002); 김두일, 『선군시대위인의 정치와 노래』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리철·심승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4); 김영, 『선군정치와 조국통일』 (평양: 평양출판사, 2004); 김봉호,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강국』 (평양: 평양출판사, 2005) 참조.

27) 『로동신문』, 2004년 2월 5일, 19일; 2005년 2월 2일, 7일, 9월 16일.

28) 『조선중앙통신』, 2007년 2월 15일.

29) 정성장, “김정일의 ‘선군정치’: 논리와 정책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 (2001), 81-114쪽 참조.

30) 『로동신문』, 2004년 1월 1일, 1월 19일; 『조선중앙통신』 2007년 3월 31일.

31) 『로동신문』, 2004년 1월 19일; 『조선중앙통신』, 2007년 2월 15일, 4월 9일.

32) 선군사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375-402쪽 참조.

33) 『로동신문』, 2007년 4월 2일; 『조선중앙통신』, 2007년 4월 15일.

34) 『조선중앙통신』, 2007년 10월 10일.

35) 『통일뉴스』, 2007년 12월 1일.

선군사상 교양을 주로 강조하면서도 대내외 환경이 개선되면 강성대국 담론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체사상의 하위담론으로 ‘붉은기사상’을 크게 강조했던 1997년과 ‘선군사상’과 함께 강성대국론을 강조한 2007년을 비교하면 북한의 지도이념에서 혁명주의적 경향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군사주의적 경향과 실용주의적 경향이 크게 강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지도이념은 지난 10년간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처럼, 향후에도 내부 경제상황, 남북한 관계,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북·미 관계의 개선 또는 악화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III. ‘수령의 후계자’ 김정일의 권력승계: 실제와 공식화

다수의 연구자들은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부터 1997년 당 총비서직 취임 또는 1998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직 재추대 시까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통치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1995년 9월 30일 김정일이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46돌을 기념하는 축전을 보낼 때 이 두 직책명을 사용한 것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sup>36)</sup> 반면 이 같은 주장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직과 군 최고사령관직이 김정일의 여러 직책 중 군사 관련 직책들이라는 점에서 그의 당과 정무원 등 비군사 부문에 대한 지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김정일은 1997년 당 총비서직에 취임하기 전에 당중앙위원회의 핵심간부들에게 ‘담화’라는 형식으로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시를 내렸는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나 ‘인민군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의 간부들에게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정일이 당 총비서직에 취임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책 중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직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그것은 김정일이 1973년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직과 조직비서직을 맡게 됨으로써 북한의 권력 엘리트 전반에 대한 인사권과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13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선출되고 ‘수령의 후계자’로 결정된 후, 동년 4월 14일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자신을 거치지 않고 바로 김일성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제재하였다.<sup>37)</sup> 김정일이 이처럼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을 통해 먼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장악하고, 당을 통하여 국가기구와 군대 그리고 근로단체까지 장악하게 됨으로써 황장엽의 표현처럼 1974년부터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sup>38)</sup>

김정일 조직비서가 당뿐만 아니라 군대와 국가 전반을 철저히 장악하게 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일성은 1977년 8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의 당조직 생활에 대하여 철저히 장악 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1979년 2월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중앙으로부터 하부 말단 단위에 이르기까지 당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김정일에게 집중시키고 김정일의 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처럼 김일성은 이미 1970년대 후반기에 군대 내의 모든 당사업을 인민군 당위원회와 총정치국을 통하여 김정일 조직비서에게 집중시키며 당정치사업뿐만 아니라 군사사업까지 김정일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혁명적 제도와 질서, 강철 같은 규율”을 확립하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sup>39)</sup> 이처럼 김일성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김정일 조직비서는 1978년경에 정치위원회 위원 등 최고위층의 인사를 제외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부장 및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추천권을 행사하게 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sup>40)</sup>

36) 『로동신문』, 1995년 10월 1일, 1면.

37) 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김정일』 (서울: 천지미디어, 1997), 117-118쪽 참조.

38) 『중앙일보』, 1999년 9월 14일.

3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15-218쪽.

40) 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김정일』, 123-126, 185-195쪽.



1980년 10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선출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제2인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김일성은 특히 만 70세가 된 1982년부터 김정일 조직비서의 군대에 대한 군사행정적 지도체계를 강화하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김정일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2년 6월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군대 내의 모든 군사사업을 김정일이 장악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당과 군대 내의 사업질서를 새롭게 규정하고 전군에 김정일의 명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동년 9월에는 중국 방문 후 귀국하여 방중 결과에 대해 당중앙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였다.<sup>41)</sup> 그리고 1984년에는 전당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을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김정일)를 중심으로 결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무원의 간부들에게 강조하였다.<sup>42)</sup> 김일성의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 덕택에 김정일 조직비서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증대되어 1980년대 중반에는 김일성을 능가하게 된다. 1974~1985년이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이었다면, 이후 1994년까지는 김정일의 권한이 한층 강화된 ‘김정일·김일성 공동정권’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의 주장<sup>43)</sup>은 이 같은 권력이동에 주목하여 나온 것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군통수권과 국방사업에 대한 전권까지 이양하게 된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됨으로써 군통수권을 물려받았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최고사령관 추대 권한을 가진 것은 바로 조선인민군이 ‘당의 군대’이기 때문이었다. 김정일은 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혁명무력건설과 나라의 국방사업 전반에 대한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김정일 조직비서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분을 가지고는 인민군대밖에 통솔할 수 없다, 나라의 전반적 혁명무력과 국방건설을 다 맡아 보려면 국방위원회 위원장 사업까지 맡아 보아야 한다, 이제는 김정일 동지가 국방위원회 위원장 사업을 맡아 볼 때가 되었다, 나는 김정일 동지에게 당과 국가, 군대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말했다.<sup>44)</sup>

김일성은 1990년대 초부터 “지금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김정일 조직비서에게 맡기고 중요한 문제들만 조직비서와 토론하여 처리하면서 대외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sup>45)</sup>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김정일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성공적으로 넘겨줄까 하는 문제만 생각하는 노인이 되어 김정일의 50회 생일을 칭송하는 송시를 쓰기까지 했다.<sup>46)</sup> 또한 항일투사들에게는 “혁명의 2세대, 3세대, 4세대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조직비서에게 충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과거에 김일성을 떠받든 것처럼 그들의 후손들도 김정일 조직비서에게 충성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다.<sup>47)</sup>

4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263-265쪽.

42) 김일성, “일군들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4년 3월 13일),” 『저작집 38 (1983.6-1984.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55쪽.

43) 『중앙일보』, 1999년 9월 14일.

4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232-237쪽.

45) 김일성, “제미교포 손원태와 한 담화 (1991년 5월 15일, 31일, 6월 2일),”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34쪽.

46)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244쪽.

47) 김일성, “항일투사들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이다 (강반석어머님 탄생 100돛기념 오찬회 참가자

이처럼 김일성이 생시에 권력의 대부분을 김정일에게 이양하였고, 확고한 지도체계와 지지기반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에 김정일 조직비서는 김일성 사후 3년간 ‘당 총비서’ 직에 오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북한을 통치할 수 있었다. 반면 1990년대 중반 북한 외부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김정일이 카리스마가 부족해 ‘당 총비서’직을 곧바로 승계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혁명위업계승의 근본문제인 영도의 계승문제가 이미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사업이 김일성의 3년상을 치른 후에 집행되었다고 반박했다.<sup>48)</sup>

남한의 대부분 연구자들은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당 총비서’직 취임 또는 ‘국방위원장’직 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김정일은 1998년 9월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의 자리에 취임했다”<sup>49)</sup>는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황장엽씨는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74년 2월 그가 당 조직비서를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끝난 것”이라며 “따라서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공식화했다해서 그의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sup>50)</sup> 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직책 중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직이 이처럼 중요하지만 남한의 연구자들에게는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직이 갖는 중요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미 김일성 시대에 권력의 핵심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비서국으로 이동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되기 전만 해도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또는 정치위원회)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74년부터 김정일 후계체계가 수립되면서 북한 권력의 핵심은 정치국으로부터 비서국으로 이동되기 시작하였다. 모든 정책과 인사 등의 결정권이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과 전문부서들로 이관되고 정치국과 전원회의 등은 사실상 이를 추진하는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는 과거 김일성 시대의 ‘정치국 위주의 정책적 당·국가체제’로부터 김정일 후계체제 시기의 ‘비서국과 전문부서 위주의 권력적 당·국가체제’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51)</sup>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는 조선로동당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조직지도부라고 증언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형식상 당의 최고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심의에 제기된 정책안들은 다 중앙위원회 안에 있는 집행부서들이 작성한 것이며, 당중앙위원회에서의 심의는 형식에 불과하다. 또 당 정책안을 작성하여 최고지도자에게 건의하는 것도 정치국이나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위원회 각 부서들이 작성하여 담당비서들을 통해 최고지도자에게 올려 비준 받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해 나가는 것은 비서국 성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52)</sup> 황 비서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여러 전문부서들 중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노동당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조직지도부는 김정일의 직속부서로서 다른 부서의 사업을 간접적으로 통제·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막강한 조직이다. 김정일은 중앙당 비서들과 정책을 결정하는데 비서국 회의에는 반드시 조직지도부 부부장들을 참가시킨다. 조직지도부 부부장들은 다른 비서들에게 예의를

들과 한 담화, 1992년 4월 21일),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72쪽.

4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310-311쪽.

49) 유호열, “김정일 지도자와 북한 체제: 이상과 실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 연구의 성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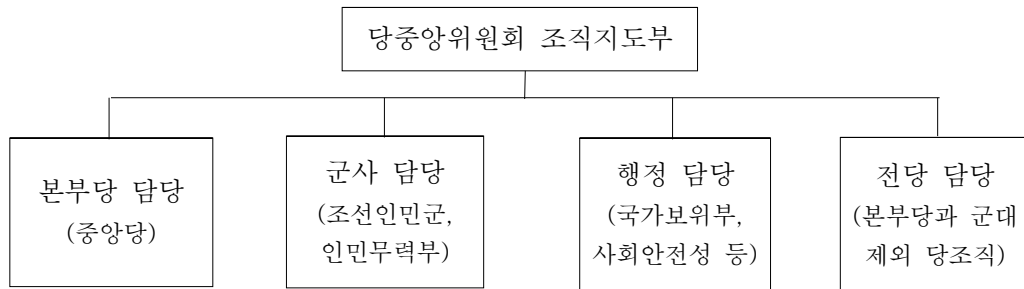
50) 『중앙일보』, 1997년 10월 21일.

51)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281쪽 참조.

52)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88쪽.

차리기는 하지만 비서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김정일과 비서들, 조직지도부라고 말할 수 있다. 황장엽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완전히 유명무실해졌고, 당 정치국 내에서도 실지로 김정일에게 정책적 건의를 하는 것은 비서들이라고 증언하였다.<sup>53)</sup>

<표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sup>54)</sup>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는 2007년 행정 부문이 당중앙위원회 행정부로 떨어져나가기 전까지 본부당(本部黨), 군사 분야, 행정 분야, 전당(全黨)을 담당하는 4개의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각 부문은 제1부부장이 맡고 있다. 먼저 본부당 담당 부문은 김정일을 제외한 중앙당 모든 간부들의 학습을 조직하고 당생활을 주관하고 있다. 중앙당의 전체 인원은 대략 3,500명 정도 되며, 이들이 본부당의 관리대상이다. 조직지도부 군사부문은 인민무력부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관장하는 부대 내 당조직선을 장악하고 있다. 군부 고위간부의 선발과 검토 등 인사는 모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간부과의 소관이므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조직지도부의 지도 밑에 군 인사 등 핵심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조직지도부의 행정 부문은 김정일에게 독자적으로 제의서를 올릴 수 있는 주요 권력기관들, 즉 국가보위부, 사회안전성, 검찰소, 재판소, 국가검열성 등을 장악하고 있었다. 예컨대, 국가보위부는 국가기구이지만 내각 밖에 있으며 사실상 조직지도부의 완전한 통제 하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사회안전성은 형식상 내각 산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조직지도부 행정 부문이 지도 통제하고 있었다. 조직지도부의 전당 부문은 본부당과 군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의 당조직, 즉 국가기구와 사회조직 내 당조직 그리고 지방당을 지도통제하고 있다.<sup>55)</sup> 이처럼 조직지도부가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기관들을 지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은 바로 이 전문부서를 통해 북한의 모든 당·군·정 고위간부들을 비롯하여 그들의 지시를 받는 하위간부까지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조직비서 직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영문 사이트는 그가 당 총비서직에 취임하기 전까지 김정일이 군부대를 시찰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에 대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나 ‘조선

53) 현성일, “북한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정책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3쪽;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190쪽.

54) 이 표는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268쪽의 비서국 내 전문부서에 대한 표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제작성한 것임.

55)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265-266쪽;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284쪽 참조.

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보다 '비서(Secretary)'라는 직책명을 주로 사용하였다.<sup>56)</sup> 그러다가 김정일 비서가 1997년 10월 8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직에 추대된 이후에는 김정일의 직책 중 '당 총비서(General Secretary)'직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김 총비서가 1998년 9월 5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에 재추대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sup>57)</sup>

김일성 사후부터 1997년 당 총비서 취임까지 김정일이 가지고 있었던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직책도 중요하지만,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일에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령의 후계자'라는 절대적 지위였다. 직책에서 권한이 나오는 법치주의 국가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들이 김정일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가 모든 조직과 법제도 위에 군림하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곧바로 '당 총비서' 직에 추대되지 않고도,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김정일의 군부대 지도 또는 외국 지도자에게 보내는 축하문과 관련하여 '국방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들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로동신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김정일의 호칭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위대한 김정일 동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와 같은 것이었다.<sup>58)</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sup>59)</sup>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sup>60)</sup>와 같이 직책을 명기하는 표현도 사용되기는 했지만, 직책명을 생략하고 최고 지도자로 떠받드는 앞의 표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이는 남한이나 미국 등 법치주의 국가들의 최고지도자를 호칭할 때 이름 뒤에 '대통령'이나 '수상' 등의 호칭을 사용하지, "위대한 ○○○ 동지"와 같이 존경심과 평등한 관계를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김정일에 대한 호칭 사용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곧 그가 '수령의 후계자'로서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수령의 후계자'로서 김정일의 절대적 지위는 1995년 10월 8일자 로동신문 정론에 잘 나타나 있다. 동 정론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태양이 없는 인간세계를 생각할 수 없듯이 수령이 없는 혁명세계를 생각할 수 없다"며 수령을 절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김정일과 김일성, 조선로동당을 동일시하고 있다. 동 정론은 또한 "장령도 전사도 간부도 로동자도 당원과 사로청원도 이 땅에

56) See *Korean Central News Agency*, December 2, 1996; December 3, 1996; February 15, 1997; February 16, 1997; February 17, 1997; April 14, 1997; April 15, 1997; September 8, 1997; September 9, 1997; September 10, 1997; October 7, 1997; October 8, 1997.

57) See *Korean Central News Agency*, October 9, 1997; September 6, 1998; February 15, 1999; February 16, 1999; February 17, 1999; June 15, 2000; December 30, 2006; December 31, 2006; February 14, 2007; October 3, 2007; October 4, 2007.

58) 『로동신문』, 1995년 9월 6일, 9일, 17일; 10월 1일, 5일.

59) 『로동신문』, 1995년 9월 4일.

60) 『로동신문』, 1995년 10월 2일.

사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의 직위와 직종으로 부르는 것보다 당의 전사, 수령의 전사라고 부르는 것을 더 영예롭게 여기며 충성 다하는 일편단심”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수령의 전사들이다”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sup>61)</sup> 김일성 사후의 북한에서 김정일이 김일성과 동일시되고 있으므로 모든 간부와 당원, 인민들이 김정일의 ‘전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다.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1997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김정일 서기의 정치기반을 논하자면 그것은 일반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견고하다. … 북한에서 후계자 역시 ‘수령’인 것이다”<sup>62)</sup>라고 당시 김정일의 위상에 대해 매우 정확한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1990년대 중후반 남한의 학계에서는 김정일이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초법적 지위를 이해하지 못해 북한 조기붕괴론이 맹위를 떨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결국 김정일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1997년 당 총비서직에 취임하고 1998년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국방위원장직에 재추대됨으로써 그의 ‘공식적인’ 지위는 올라갔지만, 그가 이미 ‘수령의 후계자’로서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장엽의 주장처럼 이전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었다. 1997년과 2007년 사이에 김정일의 권력 및 영향력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변동은 없었지만, 김정일의 권력 장악력에 대한 외부세계에서의 인식에는 큰 변화가 발생했다. 1997년에만 해도 외부세계에서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매우 취약해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년의 시점에서 볼 때 그 같은 시각을 가진 연구자는 소수로 전락하였고, 대다수 연구자들은 김정일이 만성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61) 최용덕, “[정론] 수령의 전사,” 『로동신문』, 1995년 10월 8일.

62) 오코노기 마사오, “‘연쇄붕괴’의 악몽과 한일 협력의 중요성” 『계간 사상』, 1997년 가을호, 271쪽.

#### IV. 당의 운영: 비상설 지도체계에서 상설조직체계 중심으로

김일성 사후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은 1980년의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이후 당 대회가 열리지 않고 있으며, 6개월에 1회 이상 열려야 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1993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았고, 정치국 회의도 김정일 시대에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서 “당적 지도의 권위가 훼손”<sup>63)</sup>되고 있으며 “노동당의 일당독재 현상은 상당부분 퇴색”<sup>64)</sup>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1990년대 중반 대부분의 북한 지역에서 식량배급이 장기간 중단되고 아사자가 대량 발생함으로써 인민들 가운데 당의 권위가 약화되고 지방 하위 단위에서 근로단체들에 의한 조직생활의 상대적인 형식화가 나타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당의 상설조직체계의 기능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당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리고 정치국 회의 등 비상설 지도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 가지고 “당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sup>65)</sup>고 판단하거나 “당의 정치적 영도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sup>66)</sup>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가?

김일성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5년마다 당 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당 규약을 무시하고 그가 사망한 1994년까지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약 1980년 이후 현재까지 당 대회가 열리지 않은 사실을 당적 권위 훼손의 근거로 들 수 있다면, 이미 김일성의 생시에 당의 권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김일성 사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sup>67)</sup> 북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김정일 시대에도 정치국 회의가 여러 차례 소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9년 2월 『평양방송』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은 1994년 7월 17일 정치국 회의를 소집, 경제회생 방안을 논의했다. 2000년 2월 25일 『평양방송』도 회의의 개최 일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애도기간에 처음으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아버지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북한의 국가장의위원회가 김일성 사망일인 7월 8일부터 1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회의가 1999년 2월 평양방송 보도에서 언급한 회의와 같은 것인지 별도의 회의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sup>68)</sup> 김정일은 1994년 10월 16일에도 정치국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가 같은 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일군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sup>69)</sup>라고 말한 것을 1998년에 발간된 김정일 선집 13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이 1998년 9월 4일 정치국 회의에서 “수령님이 계시지 않는 조건에서 주석제

63) 김창근, “북한 당·정·군 권위관계의 변화: 1990년대를 중심으로,” 180-182쪽 참조.

64) 정우곤, “조선로동당의 위상·기능·조직,”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정치 2』 (서울: 경인문화사, 2006), 176쪽.

65) 김창근, “북한 당·정·군 권위관계의 변화: 1990년대를 중심으로,” 180쪽 참조.

66)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265쪽.

67) 김창근, “북한 당·정·군 권위관계의 변화: 1990년대를 중심으로,” 180쪽;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265-267쪽.

68)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133-134쪽 참조.

69)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37쪽.

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서 “주석이라는 직함은 오직 수령님과만 결부시켜 부를 수 있도록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석과 관련한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주석제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2001년 9월 8일자 『청년전위』(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관지)를 통해 보도되었다. 그리고 1999년 2월 4일에도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어 김정일이 “인민군대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도 지켜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도 다그쳐 나갈 수 없고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2001년 6월 21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sup>70)</sup>

일부 전문가들은 1997년부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명의를 전반적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영남 대의원은 김정일 당 총비서를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는 연설을 통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에 이미 맡기하시고 추천하신대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 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제의를 본 최고인민회의에 보고 드린다”고 말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명의를 분명하게 사용하였다.<sup>71)</sup>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이 있었다는 김영남의 언급은 전날 정치국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2001년 9월 8일자 『청년전위』 보도에 의해 뒷받침된다.

물론 김정일 시대에는 김일성 시대에 비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소집되고, ‘정치국의 위임’이라는 표현도 매우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김정일 시대에 당의 ‘집단적 협의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은 김정일이 권력상층부에서의 집단적 협의와 정책결정체계보다 당내의 전문부서들과 국가, 정부 및 사회의 여러 부문들이 정책작성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 및 합의하여 작성한 다음 그에게 개별적으로 문서로 올려 보내는 정책초안(‘제의서’나 ‘보고서’)에 비준(서명)하는 방식의 정책결정과정을 명백히 선호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72)</sup>

북한 외교관 출신의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같은 당의 집단적 협의체계를 외면하고 밀실정치와 ‘비준정치’를 선호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북한과 같이 고도로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아무리 상층부에서 집단적으로 정책토의를 한다고 해도 김정일의 의사나 의도에 반하는 그 어떤 정책적 의견이나 건의도 나올 수 없는 것은 자명하지만, 그러한 싹이 자랄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김정일에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대부분이 김일성의 세대, 즉 김정일에게 아버지뻘이 되는 ‘혁명 1세대’ 혹은 ‘1.5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는 당 정치국 회의에서 매번 자기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정책토의를 독재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이다.<sup>73)</sup>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07년 12월 현재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김정일을 제외한 전원이 70대 후반 또는 80~90대의 나이이다. 특히 정치국에는 김정일의 삼촌인 김영주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김정일로서는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서 어떠한

70)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134쪽에서 재인용.

71) 『조선중앙통신』, 1998년 9월 5일.

72) 현성일, “북한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30쪽.

73) 현성일, “북한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31쪽.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정치국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정책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2>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명단(2007년 12월 현재)<sup>74)</sup>

이름(출생연도)	정치국 직책	겸직(비고)
김정일(1942)	상무위원, 위원	당 총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 당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공화국 원수,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박성철(1913)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공동의장,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김영주(1920)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김일성의 동생)
김영남(1928)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전병호(1926)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군수공업 담당),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부장, 국방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 1기 대의원 겸 대의원자격심사위원장
한성룡(1923)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경제담당), 최고인민회의 제 1기 대의원
김철만(1918)	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前 제2경제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2005년 당창건 60주년 행사 참석 이후 활동 부재)
최태복(1930)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대의원
양형섭(1925)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 1기 대의원, 조국전선 공동의장, 조평통 부위원장 (前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김일성의 사촌매부)
홍성남(1929)	후보위원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前 내각 총리)
최영립(1929)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최고인민회의 제 1기 대의원 (前 중앙검찰소장,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홍석형(1929)	후보위원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최고인민회의 제 1기 대의원 겸 상임위원회 위원

비록 김정일 시대에 정치국 회의가 빈번하게 소집되지는 않고 있지만, 많은 행사에서 북한의 파워 엘리트들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국원’ 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자격으로 연설하거나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4월 14일 개최된 김일성 주석 탄생 88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양형섭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기념보고를 했다.<sup>75)</sup> 그리고 2005년 10월 9일 개최된 조선로동당 창건 6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영남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

74) 이 표는 『2007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서울: 통일부, 2007), 12쪽과 『2007 북한의 주요인물』(서울: 통일부, 2007)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75) 『조선중앙통신』, 2000년 4월 14일.



원장” 자격으로 경축보고를 했다.<sup>76)</sup> 2007년 10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에서 개최된 ‘전국당세포비서대회’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영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홍석형”이 참가하였다고 보도함으로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의 주요 엘리트들을 정치국의 직책으로 불렀다.<sup>77)</sup> 대부분의 정치국 위원 또는 후보위원이 국가기구나 당 내에서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중요 행사에서 정치국의 직책으로 불리는 것은 북한이 여전히 정치국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일 시대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그것은 당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리고 정치국 회의 등 ‘비상설 집단지도 및 협의체계’는 당 규약상 각 수준에서 외형적으로는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김일성 시대에 실제적으로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sup>78)</sup>

김일성 사후 북한 외부에서 조선로동당의 당적 지도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다는 부적절한 인식이 확산되었던 것은 당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설 지도체계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당의 운영과 사회통제 기능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김정일 시대에 당의 비상설 지도체계가 더욱 약화되기는 했지만, 당의 상설조직체계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국가기구와 군대 등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의 ‘상설조직체계’란 중앙의 경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과 그 산하의 전문부서들(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국제부 등), 지방 및 하급 당조직들의 경우 해당 당위원회의 비서처와 그 산하의 전문부서들을 의미한다.<sup>79)</sup> 당 규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당의 ‘상설조직체계’가 바로 당의 실질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명단(2007년 12월 현재)<sup>80)</sup>

이름(출생연도)	담당 분야	겸직(비고)
한성룡(1923)	경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 1기 대의원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 해임) (2004년 8월 이후 동정 전무)
전병호(1926)	군수공업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부장, 국방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 1기 대의원 겸 대의원자격심사위원장
김국태(1924)	간부	당중앙위원회 간부부장,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김중린(1924)	근로단체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김기남(1926)		당 역사연구소장, 최고인민회의 제 1기 대의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1930)		정치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고인민회의 제

76) 『조선중앙통신』, 2005년 10월 9일.

77) 『조선중앙통신』, 2007년 10월 26일.

78) 현성일, “북한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8쪽.

79) 현성일, “북한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32쪽.

80) 이 표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http://unibook.unikorea.go.kr/new2/index.jsp>, 검색일: 2007. 12. 9)에 올려진 “북한권력기구도(2007.1.1)”와 『2007 북한의 주요인물』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11기 대의원
--	--	---------

김일성이 생시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정치국 회의를 자주 소집했던 것과는 다르게 김정일이 이들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당을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1991년과 1992년 두 해 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을 비교해보면, 김일성보다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앞에서 연설하거나 이들과 담화를 가진 것이 훨씬 많다. 이 기간 동안 김일성이 당의 핵심 일군들 앞에서 연설하거나 담화를 나눈 것은 단 두 차례, 1991년 11월 23일과 26일 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협의회에서 연설한 것과 1992년 12월 28일 당, 행정경제기관 일군들과 담화를 가진 것이 전부이며, 그것도 행정경제기관 일군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였다.<sup>81)</sup> 반면 같은 기간 김정일은 1991년 1월 5일 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연설을 했고, 동년 5월 5일과 1992년 1월 1일, 1월 3일, 2월 4일, 4월 17일 11월 14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담화를 가졌으며, 1992년 7월 23일과 11월 12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sup>82)</sup> 즉 같은 기간 김일성보다 김정일이 더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전문부서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했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김정일 저작을 수록한 『선집』 14권과 15권에서 각종 축하문과 서한, 그리고 논문을 제외하면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가 전체 담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선집』 14권을 분석해보면, 이 책에는 총 38편의 저작이 실려 있는데 각종 축하문과 서한, 논문을 제외하면 김정일의 담화가 26편 실려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는 16편으로 전체 담화 중 거의 62%를 차지한다.<sup>83)</sup> 『선집』 15권에서도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당, 국가, 군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포함)는 19편을 차지하여, 전체 담화 35편 중 약 54%를 차지한다.<sup>84)</sup>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김정일의 담화를 분석해보면,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이외의 인사들과 한 담화들은 “평안북도 토지정리 사업을 현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의 사업을 현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새로 건설한 메기공장을 현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창작가, 예술인과 한 담화,” “재미너류기자 문명자와 한 담화” 등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김정일의 통치에 있어서 여전히 당중앙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사후 당의 위신이 실추되고 당의 우위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81) 김일성,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82) 김정일, 『선집 11 (1991.1-199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선집 12 (1991.8-199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선집 13 (1992.2-1994.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83) 김정일, 『선집 14 (1995-199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84) 김정일, 『선집 15 (2000-200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 V. 맺음말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 사후 주체사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붉은기 담론과 강성대국 건설이론 그리고 선군정치 이론 등 새로운 담론들과 이론들을 제시함으로써 인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최소화하고 심각한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중 붉은기 담론은 경제난의 심화와 대량 아사자 발생 등 대내적 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당과 인민들을 결속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이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이상에 대한 일반 인민들의 기대가 무너진 상황에서 강국 또는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인민들을 동원하였으며, 선군정치 이론 또는 선군사상은 군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대내외 안보환경의 악화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1997년 10월 조선로동당 총비서직에 추대되기까지 북한을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1973년부터 가지고 있었던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직의 중요성과 ‘수령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일은 북한의 전체 권력엘리트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 총비서직에 서둘러 취임하지 않고도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수령의 후계자’로서 김일성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 당적 영도의 권위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 같은 주장은 거의 유명무실화된 당의 ‘비상설 집단지도 및 협의체제’를 과대평가하고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상설조직체제’의 역할과 김정일의 정책결정 스타일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정치국 회의를 자주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의 저작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가 주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을 통해 통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대내적으로 철저히 정보를 통제하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논리들을 개발해 체제를 정당화하고 인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의 이념이 김정일 시대에 혁명주의적 경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군사주의와 실용주의라는 얼핏 보기에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경향을 강화시켜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 남북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이념에서 군사주의 경향을 약화시키고 실용주의 경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한국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발언이나 북한의 논리를 가지고 각종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보다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직이 매우 중요하였고,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통치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황장엽 등 일부 고위 탈북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국정 전반을 장악하기에는 부적절한 군사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국방위원회’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을 움직이는 조선로동당은 과소평가하는 문제점이 학계에서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조속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현재 김정일의 나이는 만 66세이고, 4년 후에는 만 70세, 9년 후에는 만 75세가 되므로 그도 후계자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 김일성 주석이 만 62세에 김정일을 후계자를 결정하였던 것에 비하면 김정일 총비서의 후계자 지명은 매우 늦어지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후계자 결정과 관련하여 특히 김일성 탄생 100주년, 김정일의 나이가 70세가 되는 2012년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에는 현재 김

정일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차남인 김정철의 나이가 만 31세가 되어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되었던 때의 나이인 만 32세에 근접하게 된다.<sup>85)</sup>

2007년 11월 30일 개최된 전국지식인대회에서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비서는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이 되는 해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고 말했다.<sup>86)</sup> 북한이 이처럼 2012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그 해에 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현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김정일을 제외한 전원이 70대 후반 또는 80~90대의 나이이다. 그 중 김영남, 전병호 위원과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후보위원은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박성철과 김영주 등 혁명1세대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직책만을 맡고 있어 사실상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7차 당대회가 개최되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일부가 퇴진하고 보다 젊은 세대가 후보위원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김정일이 당 총비서로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직까지 맡고 있는데, 향후 그의 후계자의 지도체제를 수립하고자 한다면 후계자에게 조직지도부장직과 조직비서직을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향후 조직지도부장과 조직비서직을 맡는 인사가 김정일의 후계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 및 조직비서로 선출됨으로써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고 그 후 정치국 위원에 선출되는 동시에 김일성의 후계자로 결정된 것처럼, 김정일의 후계자도 가까운 미래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및 정치국 위원에 선출되고 후계자로 ‘추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김정일이 1980년 개최된 제6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선출되어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한 것처럼, 김정일의 후계자도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유일적 지도체제’를 더욱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김정일이 4~5년 내에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진하거나 쿠데타 등으로 권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북한의 정치체제는 최고지도자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유일적 영도체제’나 ‘집단지도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물론 누가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과거 김정일이 누렸던 것과 같은 절대 권력을 향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 지도부 내에서 권력 투쟁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일이 유언을 통해 후계자를 지명하면 초기에는 그 후계자를 중심으로 권력 엘리트들이 단합하는 양상을 보이겠지만, 후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곧 분열 조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까운 미래에 북한에서 민주적인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87)</sup>

1994년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대립의 심화로 북한 지도부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증대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북한의 대외안보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군부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의 안보환경을 개선시키고 조선로동당 지도부 내에서 군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대책 접근이 필요하다.

85) 김정철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정성장, “김일성·김정일 권력세습 유력한 차기 후계자: 베일에 가려진 김정철은 누구인가?” 『뉴스한국』, 2008년 8월호, 14-25쪽 참조.

86) 『통일뉴스』, 2007년 12월 1일.

87) 정성장, “Post-김정일 체제 전망 - 후계자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연구소북한학회 공동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2008년 6월 23일) 참조.

## 참 고 문 헌

### 1. 북한 문헌 및 자료

#### (1) 김일성, 김정일 저작

- 김일성. 『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a.  
\_\_\_\_\_.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b.  
김정일. 『선집 11 (1991.1-199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_\_\_\_\_. 『선집 12 (1991.8-199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_\_\_\_\_. 『선집 13 (1992.2-1994.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선집 14 (1995-199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_\_\_\_\_. 『선집 15 (2000-200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_\_\_\_\_.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  
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 (2) 단행본

- 강성길. 『선군시대의 조국을 가다』 평양: 평양출판사, 2002.  
김두일. 『선군시대위인의 정치와 노래』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4.  
\_\_\_\_\_.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강국』 평양: 평양출판사, 2005.  
김 영. 『선군정치와 조국통일』 평양: 평양출판사, 2004.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김창원.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리철·심승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박일범.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철학연구소.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 (3) 논문, 신문, 잡지 및 기타

- 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년 1호  
(1999).

리종대·동대관, “붉은기를 높이 들자,” 『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 정론.  
최용덕, “[정론] 수령의 전사,” 『로동신문』 1995년 10월 8일.  
최용덕·김정웅, “우리는 백배로 강해졌다,” 『로동신문』 1997년 12월 12일 정론.  
최칠남·동대관·전성호,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9년 8월 22일 정론.

『로동신문』. 1995년 9월 4일, 9월 6일, 9월 9일, 9월 17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5일;  
1997년 1월 1일; 2004년 1월 1일, 1월 19일, 2월 5일, 2월 19일; 2005년 2월 2일, 2  
월 7일, 9월 16일; 2007년 4월 2일.

『조선중앙통신』. 1998년 9월 5일; 2000년 4월 14일; 2005년 10월 9일; 2007년 2월 15일, 3  
월 31일, 4월 9일, 4월 15일, 10월 10일, 10월 26일.

*Korean Central News Agency*. 2 Dec 1996, 3 Dec 1996; 15 Feb 1997, 16 Feb 1997, 17 Feb  
1997, 14 Apr 1997, 15 Apr 1997, 8 Sep 1997, 9 Sep 1997, 10 Sep 1997, 7 Oct  
1997, 8 Oct 1997, 9 Oct 1997; 6 Sep 1998; 15 Feb 1999, 16 Feb 1999, 17 Feb  
1999; 15 Jun 2000; 30 Dec 2006, 31 Dec 2006; 14 Feb 2007, 3 Oct 2007, 4 Oct  
2007.

## 2. 남한 문헌 및 자료

### (1) 단행본

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김정일』 서울: 천지미디어, 1997.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신일철.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 쇠퇴』 서울: 생각의나무, 2004.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통일부. 『2007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서울: 통일부, 2007.  
\_\_\_\_\_. 『2007 북한의 주요인물』 서울: 통일부, 2007.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_\_\_\_\_.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 지음, 신현호 옮김, 『김정일의 요리사』 서울: 월간조선사, 2003.

### (2) 논문

김근식. “북한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_\_\_\_\_.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  
연구학회(편), 『북한의 정치 2』 서울: 경인문화사, 2006.  
김창근. “북한 당·정·군 권위관계의 변화: 19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0).  
서재진.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북한체제의 현주

- 소』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송영대. “북한의 내구력 - 정밀분석.” 『북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서울: 서울신문사, 1997.
- 오코노기 마사오. “‘연쇄붕괴’의 악몽과 한일 협력의 중요성.” 『계간 사상』 1997년 가을호 (1997).
- 유호열. “김정일 지도자와 북한 체제: 이상과 실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편), 『북한 연구의 성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 정성장. “김정일의 ‘선군정치’: 논리와 정책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 (2001).
- \_\_\_\_\_. “Post-김정일 체제 전망 - 후계자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연구소·북한학회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 논문(2008년 6월 23일).
- \_\_\_\_\_. “김일성·김정일 권력세습 유력한 차기 후계자: 베일에 가려진 김정철은 누구인가?” 『뉴스한국』, 2008년 8월호.
- 정우곤. “조선로동당의 위상·기능·조직.”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정치 2』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 (2008).
-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계간 사상』 1997년 가을호 (1997).
- 현성일. “북한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3) 신문, 잡지 및 기타

『중앙일보』. 1997년 10월 21일; 1999년 9월 14일; 2000년 4월 25일.

『통일뉴스』. 2007년 12월 1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권력기구도(2007.1.1).” <http://unibook.unikorea.go.kr/new2/index.jsp>. (검색일: 2007. 12. 9)